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조인영**

박종민***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며,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가설, 사회화 가설, 계층 가설을 통해 검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후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막상 탈북 이후 이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누락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경제적 여건, 탈북 시기나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또는 남한에서의 교육 여부보다는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계층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엘리트 출신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며, 경제적 엘리트 출신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 이후 계층 격차로 인한 괴리 또는 출신 성분의 유산이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유발하거나 적응의 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체제 적응에 관한 연구에 이론적, 경험적으로 기여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폐쇄경제의 유산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정치학회 한국학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토론회 중 북한대학원대학교 김 정 교수와 유익한 심사평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8S1A3A2075609)이다.

** 제1저자, 영국 University of Oxford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정치경제, 불평등, 사회정책, 재정 등이다(inyoung_cho@korea.ac.kr).

*** 교신저자,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민주주의와 관료제, 국기와 시민, 정부의 질 등이다(cmpark@korea.ac.kr).

I. 서론

일인, 일당 독재 및 계획경제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이후 남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잘 적응¹⁾하고 있는가? 이들의 사회 통합 및 적응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미래 통일 한국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체제 전환 경험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이를 다양한 이론과 사례로서 분석하는 것은 학술이론 발전 및 실증연구 측면에서도 상당한 연구가치를 지닌다. 탈북자의 수는 지난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20년 3월 기준, 누계 3만 3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통일부, 2020)²⁾. 이들의 체제 적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및 정치·사회경제적 태도와 인식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본 연구는 SSK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주요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일차적으로는 이를 남한 시민들의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인식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무엇이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잘 설명하는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정치경제 이론 및 사회화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을 탈북 이전과 이후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에서의 경험의 유산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과연 무엇이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에 대해 유연한, 또는 더욱 완고한 태도를 보이게 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체제 전환의 경험 이후 시민의 정치경제적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는 사회화 및 행태 이론을 바탕으로 세 가지 경쟁적 가설을 도출하였다. 폐쇄경제의 경험적 유산(legacy)의 지속가설, 남한에서의 교육이 탈북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교육 사회화 가설, 그리고 탈북 이전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탈북 이후의 체제

1) 사회적응의 정의 및 개념과 관련, 통일연구원(1996: 4)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체제 적응, 생활적응, 심리적응의 3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출처: 통일부 《탈북자통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층가설이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북한 이탈주민은 탈북 이후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결과 탈북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한 자유 시장경제에의 편입이 지체되고,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정부나 유관 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공교육 등을 통해 재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면,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보다 긍정적이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출신, 즉 북한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정치적, 사회적 계층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북 이전과 이후의 삶에서 계층 격차로 인해 느끼는 인식적 괴리는,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유발하거나 적응의 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 세 가설을 바탕으로 《2018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남한 주민의 인식과 비교하기 위해 SSK 거버넌스의 다양성 센터에서 동일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동년도에 조사한 《2018 정치경제 인식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큰 반감이나 부정적 인식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지지의 정도는, 정치사회화 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성격 형성기(formative years 또는 critical years, 보통 25세 이전)를 북한에서 보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치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북한 이탈주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부적응을 발견한 것과는 달리(e.g. 오현진·박종민 2019), 시장경제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한 반감은 그다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일단 표면적인 관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며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교육 변수는, 그것이 북한에서의 교육이든 혹은 남한에서의 교육이든,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재사회화를 통해 남한에서의 교육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속해 있던 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며, 반면에 북한에서의 정치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북한에서 경제적 엘리트였을수록 탈북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순응이 더 높았으며, 반면 정치적 엘리트는 시장경제에 대해 좀 더 높은 반감을 보였다. 이는 북한에서 경제적 엘리트 계층은 장마당 경험 등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있기에³⁾ 탈북 이후에도 시장경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정치적 엘리트 출신이라면 계획경

체제에 대한 향수 때문에 혹은 탈북 이후의 계층과의 괴리에서 오는 불만족 탓에 시장경제를 덜 지지하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에서 북한에서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어슨 상관계수 0.062), 적어도 이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지위는 경제적 지위와 독립적이었으며, 이는 탈북 이전의 경제적, 정치적 계층이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력이 차별적이라는 해석에 상당한 타당성을 준다. 또한, 이는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더욱 높은 계층에 속했을수록 탈북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이 더되거나 혹은 체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북한에서의 계층의 유산이 탈북 이후 체제 적응에 상당한 지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체제 적응 교육 훈련의 개선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과 이의 설명요인을 밝히는 기존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및 사회경제에 대한 태도 및 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공백(gap)을 채우는 데 기여한다. 무엇이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설명하는가? 이는 단순히 시간에 따른 적응의 문제인가 아니면 폐쇄경제체제의 강한 유산인가? 민주주의만큼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과 이해는 남한 사회적응에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는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갈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체제이탈 이후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체제로 이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기존연구 및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남한 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기술통계를 통해 간단히 비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의 특징이 발견되는지 확인한다. 이후 분석에서는 체제이행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설화하여 분석한다. 이후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3) 북한의 신 경제적 엘리트 계층은 주로 중국과의 중계무역에 바탕으로 장마당에서 재화의 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도가 더욱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Haggard & Noland 2011)

II. 기존문헌 연구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 용역과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형성하며, 이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 재화가 배분되며,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닌 이상 정당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부의 확대를 강조하며,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시장경제의 특성은 북한의 경제체제와는 사뭇 다르다. 장마당과 같은 유사 시장 형태를 활용한 거래 시스템이 상당 부분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장마당 이용은 불법이며 개인의 사유재산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기업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화의 배분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북한의 경제체제는 여전히 폐쇄적이며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이후 남한의 상이한 경제체제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북한에서의 오랜 경제적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순응은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거쳐 입국하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중국 경제체제에의 노출 기간이 길었다면,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상당 기간의 적응과정을 거쳤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입국 직후 남한에서 받는 공식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해 학습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통일부, 2019)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입국 후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배운다. 이외에도 취업 지원 및 직업 교육을 수료하며, 퇴소 이후 실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점차 시장경제에 적응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그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체계적 연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체제전환을 경험한 시민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보통 정치 태도에 대해 주목해 왔다. 체제전환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와 정치제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탈 이전과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회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Dalton 1994; Haggard & Noland 2010, 2011; Welzel 2013). 일례로, 최근 연구인 오현진·박종민(2019)에 따르면, 기존연구들은 체제 전환 경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적응의 지체가 일어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체제 전환 경험 시민들의 정치 태도에 주목하는 연구에 비해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market economy)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e.g. Linz 1988; MacClosky & Zaller 1984; Shiller et al., 1991; Hayo 1999). 정치체제에 대한 적응 못지 않게 경제체제에 대한 적응도 체제 전환 경험 시민들에게 있어 무척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부족은 아쉽다.

기존연구는 체제 전환을 경험한 시민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정치체제보다는 경제체제에 더욱 유연한 적응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선 Roller (1994)의 연구는 동유럽 시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 및 태도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문항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혼재된 부분이 있으나, 주로 설문 응답을 단순 기술한 결과만을 보고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Mason(1995)은 구 동구권 1991년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 사회 정의 프로젝트(International Social Justice Project, ISJP)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제 전환 경험 시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support for a market economy)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유럽 12개국의 시민들은 70~90% 이상의 비율로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설문은 설문 참여자에게 '시장경제 지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단순 질의함으로써 개인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결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와 경제체제에 대한 태도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1992년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조사한 Gibson(1996)의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는데, 두 인식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나, 분석 결과 경제적 가치가 일치적인 것은 아니며, 정치적 견해가 경제적 견해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만 태도를 다른 태도로 설명한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존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 또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적응의 지체 내지는 부적응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을 통한 가설 검증이 부족했으며, 경험적 분석이 충분히 누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 Pop-Eleches & Tucker (2014)는 기존 연구의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국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공산주의에의 긴 노

출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의 반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논증하였다.

국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통일연구원, 2016)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쟁의 중요성, 성과 및 개인 노력의 강조와 같은 시장경제의 요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경영자와 노동자 간 보상이 동등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다소 이질적인 인식차를 보였다. 다만 이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아닌,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같은 집단 간 태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 연구의 논의에 덧붙여,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적 흐름을 경제적 설명, 사회화론, 계층 기반 설명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1) 경제적 설명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해 태도를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Meltzer & Richard (1981; 1983) 이후의 연구 흐름을 반영한다. 최근 연구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객관적 지위 및 주관적 경제 인식과 관련한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이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해 태도를 결정한다. 가령 Meltzer & Richard(1981; 1983)는 개인은 전체 소득집단에서의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조세(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포털 모델을 통해 논증하였다. 정치경제학에서의 태도 및 선호 관련 연구들, 가령 복지태도나 경제투표 관련 연구들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노동자의 기술특정성(Asset specificity) 및 이와 관련한 실업의 위험이나 보험(insurance) 욕구, 현재 혹은 과거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및 회고를 통해 사안에 대해 긍정·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e.g. Anderson & Pontusson 2007; Blekesaune 2007; Erikson 1990; Iversen & Soskice 2001; Lewis-Beck & Stegmaier 2000; Moene & Wallerstein 2001; Rehm 2009, 2016; 권혁용 2013; 이철승 외 2018) 이 같은 논리를 체제 전환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소득수준, 직업 유무와 같은 개인의 (객관적) 경제적 위치, 그리고 개인의 과거·현재의 경제 상황의 함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미래의 국가경제나 가정경제, 혹은 개인의 예상소득에 기반한 주관적 경제 전망 역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대

한 연구와 관련하여, 권수현과 이성우(2017)는 고용지위, 소득격차 인식 및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주관적·객관적 경제(인식) 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주관적 경제 인식 변수의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이다.

가설 2) 북한이탈주민의 과거,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이다.

2) 사회화론

다음으로 사회화 이론에 기반한 설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태도 연구에 있어 경험적 유산(legacy)의 지속성(continuity)을 강조하는 접근과, 현실적 여건의 영향이나 교육과 학습을 통해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변성(changeability)을 강조하는 접근이 있다. 먼저 전자의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체제이행을 경험한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함에 있어 기존 제도의 관성이나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legacy)이라는 제약에 직면한다고 본다. 제도를 통해 가치가 형성되고 내면화된다고 보며, 이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상당한 관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e.g. Eckstein 1966; Mishler & Rose 2001a, 2001b; Rohrschneider 2004). 또한, 개인의 일생에는 성격 형성 및 태도 형성에 있어 유연함이 있는 성격 형성기(formative years 또는 critical years)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이 이 시기를 지나면 큰 변화를 경험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시각을 견지한다(Easton & Dennis 1969; Mishler & Rose 2001b; Bartels & Jackman 2014). 즉, 성격 형성기 또는 중요 시기를 지나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에의 적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며, 북한의 독특한 공산주의 및 폐쇄경제의 그림자는 개인의 태도에 쉽게 단절할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을 것이라 예상한다 (e.g. Pop-Eleches & Tucker 2014). 이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3) 북한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던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4) 성격 형성기를 북한에서 보낸 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그 전에 탈북한 사람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다.⁴⁾

하지만 정치사회론의 설명이 늘 관성과 지속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탈북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북 이전의 경험이 희미해지고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누적되었다면, 시장경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e.g. Careja & Emmenegger 2012). 인간의 근시성(short-sightedness)은 과거의 경험에 비해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e.g. Wleziem 2015), 새로운 경험은 과거의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사하게 교육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주장은 이 같은 초기사회화의 유산 또는 관성을 증시하기보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학습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은, 남한에서의 교육을 통해 획득되고 변화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자연스러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회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의 적응과 집단 동질성의 확보를 통한 재사회화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5)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⁵⁾

한편 북한에서의 장마당 경험은, 북한에서 이미 시장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행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을 암시한다(Haggard & Noland 2011). 물론 장마당 경험이 반드시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선행학습을 경험한 경우 시장경제에의 적응이 조금 더 용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 4) 하지만 이러한 가설에 대한 반론 중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실제로는 그리 폐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북한이 이미 폐쇄경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하며, 2002년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에 시장경제의 싹이 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정영철 2004).
- 5) 그러나 경제에 대한 인식이란 학교 교육이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받는 간접적 영향보다는 실제 경제 현실에 참여하여 습득하는 실질적인 경험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위의 가설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가설 6) 장마당 경험이 있는 주민의 경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긍정적일 것이다.

3) 계층 기반 설명

마지막으로 계층론적 설명은, 계급은 자기 이익에 기반한 계급의식의 산물로(안상훈 2020: 68)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을 바탕으로 하며, 주로 복지태도 연구에서 발전해 온 이론적 흐름이다(e.g. Esping-Andersen, 1990, 1999; Svallfors 1997, 1999).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계층 관련 설명은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의 계급적·계층적 괴리(사회적 지위의 괴리)가 현재의 태도에 차이를 준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체제 전환을 경험한 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이탈 이전 속해있던 계층이 현재의 그것보다 높다면, 체제 전환 이후의 삶에 대한 순응이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북한에서는 정치 엘리트였으나 남한 이주 이후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면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체제에서 경험하는 절대적인 경제적 여건보다는, 타 인과의 비교의 맥락, 즉 상대적 여건의 고저에 주목하며, 기존 체제에서 속했던 계층과 현재 나의 계층과의 괴리이기 때문에, 폐쇄경제에서 자유경제로의 이주가 아닌 그 역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⁶⁾

그러나 이탈주민이 속해 있던 기존의 정치적 계층과 경제적 계층이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가령 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경제 엘리트였다면 그는 장마당 등을 통해, 그리고 중국 등지와의 중계무역 등을 활용하게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달성한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Haggard & Noland 2010, 2011). 이는 시장의 자유주의적 속성을 활용하여 부를 축적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이탈주민은 남한의 자유경제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이 다른 누구보다 높을 수 있으며 현 체제에서도 상당한 적응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⁷⁾ 반면 북한에서 정치적 계층이 높았던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에서 이전에 비해 낮은 정치적 계층에 속하게 된 셈이기에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예상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6) 그러나 안상훈(2020)은 최근 연구에서 분석적 준거로서 계급이 갖는 영향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7) 다만 본 연구가 활용한 설문자료에서 북한에서의 경제적 계층과 현재 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약 0.12로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가설 7)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상층 계층이었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반대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상층 계층이었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이 위와 같은 기존 이론의 시각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비판 중 하나는 북한을 과연 폐쇄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북한의 배급제는 사실상 2000년 이후 유명무실해졌으며, 장마당을 위시한 유사 시장경제 제도가 여러 재화를 거래하는 시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북한 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북한에 이미 제한적인 형태의 시장경제가 도입된 지 오래라 본다면, 남한과의 경제 체제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305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장마당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이탈주민이 상당수였으며, 그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또한 북한을 제한적 시장경제체제라고 이해하기에는 북한에서 장마당 이용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불법이며, 대부분의 거래는 비공식적으로 음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장마당의 역할이 실제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진정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물물거래의 한 장으로 제한적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완벽히 개방된 형태의 시장을 경험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⁸⁾

또한, 설문 응답의 신뢰도에 대해 지적하는 일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⁹⁾ 혹자는 이 같은 경우 다화에 걸친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응답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함으로써 거짓 응답을 방지할 수 있다는 대안적 방법을 제안하지만,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

8) 물론 탈북 이전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탈북 직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론하는 준실험설계적 방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샘플사이즈의 한계로 인해 그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9) 특히 설문 조사 참여 경험이 대단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일종의 '정답'을 말하려 하거나, 연구진이 원하는 응답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다는 데 대한 지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일반설문조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설문조사 회사의 풀에 동일한 북한이탈주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2019 한국정치학회의 토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 300명이 넘는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일반화된 설문 응답 방식(일대일 대면면접조사)을 채택하였다. 다만 본 연구진은 제기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예비 연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즉, 본 설문을 실시하기 전 북한이탈주민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각 설문 문항에 대한 민감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¹⁰⁾

III. 기초통계: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본 연구는 2018년 5월부터~8월 사이에 SSK 거버넌스의 다양성 센터에서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응답자의 특성상, 탈북자 단체를 통한 스노우볼 채집 방법으로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며, 성별, 연령,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할당 추출하여 총 305명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초통계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 142명(47%), 여 163명(53%)이었으며, 연령대는 19~80세, 평균연령은 45세였다. 남한거주기간은 1~35년까지 다양하였으나, 평균 9년이었다. 주요 탈북 동기는 가족을 따라서 (31%), 경제적 이유(28%), 정부통제 피해서(22%), 한국이 좋아서(18%)의 순이었는데,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의 비중은 20%대로 엇비슷하였다. 비정치적, 비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선택한 비율도 50% 가까이로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표는 부록에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확보한 다음의 여섯 문항으로, 연구의 연속성 및 문항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10) 본 연구가 활용한 원 설문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추가적인 문항을 포함하면 약 100여개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 조사에서는 각 문항이 대답하기 민감한 질문인지, 따라서 거짓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위양스를 가진 질문인지 여부를 예비조사자들에게 질의, 확인하여 문항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그래서 사전 연구에 참여한 모든 설문 검토자가 질문의 민감성이 높지 않다고 동의할 때까지 수 시간에 걸쳐 질문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이 달라 질문 문항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또한 일할 수 있는 설문 응답 및 거짓 응답을 배제하기 위해 문구를 바꾸거나 쉬운 단어로 변환하였다. 또한, 모든 면접 조사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설문지 인터뷰하는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또한 가능한 한 최대한 모든 인터뷰 과정에 연구조교를 배치하여 설문 응답 과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설문 응답 과정의 특이성이나 무성의한 응답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설문지의 질을 향상하였다.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기존연구들¹¹⁾과 본 연구가 차별되는 지점은,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연구방식을 택한 여러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진은 자본주의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는 문항을 다수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자유시장경제나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질의하는 경우, 각 응답자가 생각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에 대한 이해도가 각기 다를 수 있기에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은 <표 1>과 같으며, 각 문항은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1>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설문문항

Q.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관해 묻습니다. 당신의 견해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1: 왼쪽 문항에 완전히 동의, 10 우측 문항에 완전히 동의)											
Q1) 소득은 보다 평등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소득 차이가 더 있어야 사람들이 더 노력한다
Q2) 기업과 산업의 개인소유가 확대되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기업과 산업의 국가 소유가 확대되어야 한다
Q3) 정부는 모든 국민의 생계유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Q4) 경쟁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1	2	3	4	5	6	7	8	9	10	경쟁은 해롭다. 사람들로 하여금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Q5) 장기적으로 볼 때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진다	1	2	3	4	5	6	7	8	9	10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과 연줄이 더 중요하다
Q6)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만 잘 살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부는 모두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늘어날 수 있다

1번 문항은 소득 격차, 2번 문항은 기업과 산업의 소유 주체, 3번 문항은 생계 책임의 주체, 4번 문항은 경쟁에 대한 견해, 5번 문항은 성공의 이유에 대한 견해, 6번 문항은 부의 확대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응답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11) 가령 통일연구원(2019)의 설문 문항은 KGSS의 문항을 일부 수정한 형태로 활용한 것이다.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응답

[1~5점 응답] (%)	[6~10점 응답] (%)
소득은 보다 평등해야 34.75	소득 차이가 있어야 노력함 65.25
기업/산업의 개인소유 확대 59.6	국가소유 확대 40.4
생계는 국가 책임 59.67	생계는 개인 책임 40.33
경쟁은 필요 81.97	경쟁은 해로움 18.03
열심히 일하면 생활은 나아짐 65.9	성공에는 운과 연줄이 더 중요 34.1
부는 타인의 희생을 기반 33.66	부는 나눌 만큼 확대 가능 66.34

〈표 2〉는 10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을 1~5의 응답(왼쪽 문항에 동의)과 6~10의 응답(오른쪽 문항에 동의)으로 구분하여 그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각 문항의 중위값은 5.5이나 흔히 중위값을 5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점에 체크한 응답자의 점수는 그 의도보다는 다소 낮게 인식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에 있어, 시장경제의 운용원리에 동의하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결과를 확인하면, 소득 차이의 필요성에 대해 65.25%가 찬성하는 편이었고, 기업·산업의 개인소유 확대에 대해서도 과반을 넘는 59.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계는 개인보다는 국가 책임이라는 응답이 59.67%를 차지하였다. 경쟁은 필요하다는 견해는 82%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 및 부는 나눌 수 있을 만큼 확대 가능하다는 견해에 65%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찬성하였다. 즉 응답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도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아이디어인 경쟁의 필요성, 개인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 기업의 개인소유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응답 결과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얼마나 특이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 결과를 동일 문항에 응답한 남한 시민들의 인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SK 거버넌스의 다양성 센터에서 1245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동년도에 조사한 《2018 정치경제 인식조사》 설문 결과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인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일반 시민 응답

[1~5점 응답] (%)	[6~10점 응답] (%)
소득은 보다 평등해야 함 42.48	소득 차이가 있어야 노력함 57.52
기업/산업의 개인소유 확대 61.54	국가소유 확대 38.46
생계는 국가 책임 42.81	생계는 개인 책임 57.19
경쟁은 필요 75.5	경쟁은 해로움 24.5
열심히 일하면 생활은 나아짐 53.41	성공에는 운과 연줄이 더 중요 46.59
부는 타인의 희생을 기반 32.53	부는 나눌 만큼 확대 가능 67.47

분석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와 비교할 때, 남한 시민들이 보다 더 자유시장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기업/산업의 개인소유 확대(61.54%), 본인 생계는 본인 책임(57.19%), 부는 모두가 나눌 만큼 늘어날 수 있다(67.47%)의 세 가지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한국 시민이 더 시장경제 지향적인 인식을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북한이탈주민들의 응답이 때로는 더 시장경제 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중위값에 가까운 5점과 6점에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만을 간추린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시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1~4점 응답] (%)		[7~10점 응답] (%)	
소득은 보다 평등해야		소득 차이가 있어야 노력함	
북한이탈주민	일반	북한이탈주민	일반
22.3	28.76	57.05	22.48
기업/산업의 개인소유 확대		국가소유 확대	
북한이탈주민	일반	북한이탈주민	일반
40.07	43.9	21.75	11.29
생계는 국가 책임		생계는 개인 책임	
북한이탈주민	일반	북한이탈주민	일반
43.93	28.51	22.62	22.81

[1~4점 응답] (%)		[7~10점 응답] (%)	
경쟁은 필요		경쟁은 해로움	
북한이탈주민	일반	북한이탈주민	일반
66.23	60.08	8.52	6.91
열심히 일하면 생활은 나아짐		성공에는 운과 연줄이 더 중요	
북한이탈주민	일반	북한이탈주민	일반
55.08	40.32	15.74	17.27
부는 타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부는 나눌 만큼 확대 가능	
북한이탈주민	일반	북한이탈주민	일반
16.5	14.38	42.57	20.66

중위값을 제외한 설문 응답을 비교한 결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관찰되었다. 일반 시민(22.48%)의 두 배가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57.05%) 소득 차이가 있어야 더욱 노력한다는, 시장경제 지향적인 문항에 동의를 표하였으며, 반대로 소득이 보다 평등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22.3%) 일반 응답(28.76%)보다 다소 낮았다. 일반 시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소득 평등에 더욱 민감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의 평등성보다는 소득 차이의 필요성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산업의 개인소유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40.07%)에 비해 일반 시민(43.9%)이 약간 더 개인소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가 소유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약 22%로, 일반 시민(11.29%)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다음으로 생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질의한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약 44%가 국가 책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일반 시민의 찬성률(28.51%)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폐쇄경제체제의 유산일 수도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많은 경우 국가의 복지혜택이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은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는 일반(60.08%)보다 다소 높은 비율의 북한이탈주민(66.23%)이 경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경쟁이 해롭다는 응답(8.52%)도 일반(6.91%)에 비해 다소 높았다.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열심히 일하면 생활은 나아진다는 문항에 대해 55.08%의 북한이탈주민은 동의를 표하였고 이는 일반 시민(40.32%)에 비해 15%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였다. 마지막으로 '부는 타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눌 만큼 확대 가능한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42.57%의 북한이탈주민이 부는 나눌 만큼 확대 가능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20.66%) 시민과 비교하여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소득 차이, 경쟁의 필요성, (개인의) 노력의 중요성, 부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에 비해 더욱더 시장경제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기업과 산업의 국가 소유 및 국가의 생계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에 비해 큰 정부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다소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결과를 문자 그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일반 시민보다 더 적극적인 시장경제의 옹호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지는 않으며, 때로는 일반 시민보다도 더 시장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IV. 데이터 및 분석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크게 세 영역의 가설을 통해 검증한다. 단년도 자료의 특성상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시행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text{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beta_1 X_1(\text{경제 변수: 직업 여부, 소득수준, 과거 및 현재 경제 상황}) + \beta_2 X_2(\text{사회화 변수: 나이, 탈북 시기, 장마당 경험, 교육수준}) + \beta_3 X_3(\text{계층 변수: 탈북 이전의 정치적/경제적 계층}) + \beta_4 X_4(\text{기타 통제변수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문항들은 10점 척도로 조사되어 순위 로짓(ordered logit) 분석이 가능하나, 응답의 범위가 넓고 단순 OLS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 해석이 더 용이한 OLS 결과를 보고한다. 잔차그래프 분석 결과 이분산성의 우려가 있어 분석에서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다.

주요설명변수는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 변수들, 사회화 변수들, 계층 변수들의 세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 변수로는 직업 유무, 소득수준, 과거 경제 상황, 현재 경제 상황의 네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직업의 유무 및 소득수준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으며, 직업이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유시장 경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였다. 직업의 유무는 더미 변수로, 직업이 있는 경우를 1로, 없는 경우를 0으로 처리하였다. 소득수준은 원 설문에서는 응답

자의 월평균 세전 가계소득을 질의하였고, 이를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계소득 (2018 기준) 경계값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¹²⁾ 과거 경제 상황은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질의하였고, 현재 경제 상황은 요즘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¹³⁾ 과거 및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나쁠수록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화 변수는 성격 형성기(post-adolescent formative years), 장마당 경험, 교육수준(북한), 교육수준(남한)의 네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성격 형성기는 탈북 당시 연령이 25세 이하인 경우를 1로 코딩한 더미변수이다.¹⁴⁾ 이는 태도에 있어 성격 형성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사회화론의 이론적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Bilodeau et al. 2010; White et al. 2008) 탈북 당시 비교적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25세 미만의 연령과 이상의 연령을 구분함으로써 성격 형성기를 전부 북한에서 보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장마당 경험은 북한에서 이미 시장경제의 속성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즉 시장경제에 선(先) 사회화 되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가 장마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교육 변수는 북한과 남한에서의 공교육(수준)을 질의한 것으로,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남한에서의 공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만 보통 청소년기 이후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아 남한에서의 공교육 경험자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다음으로 계층 변수는 북한에서의 계급의 유산 또는 북한에서의 계층과 현재 삶의

- 12) 단 본 설문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은 1~8분위의 범위에서만 보고되었다.
- 13) 일반적으로 많은 기존 설문들은 과거 경제 상황을 측정할 때 지난 1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질의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의 모호성에 대한 심사자의 지적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넓혀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상황(5점 척도)을 활용하였다. 과거 경제 상황을 질의한 원 문항의 문구는 "몇 년 전과 비교해 ○○님 님의 경제 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본 OLS 분석 결과에서는 과거의 경제 상황을 질의한 두 문항(1년 또는 지난 몇 년)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과거 경제 상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 경제 상황을 질의한 원 문항은 "요즘 ○○님 님의 경제 사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 14) 이 연구에서 설정한 25세라는 기준은 다소 임의적으로, 정치태도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은 청년기를 17세에서 30세 사이로 다양하게 설정한다 (e.g. Jennings & Niemi 1981; Bilodeau et al. 2010; Whit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인식에 비해 경제적 인식은 더욱 유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30세로 연령 기준을 다소 낮추어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25세 혹은 30세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도 성격 형성기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회귀분석 결과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격차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북한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계층의 측정은 응답자가 북한에서 본인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 정치적/경제적 계층(하층, 중층, 상층)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는 나이(자연로그), 탈북 이후 남한입국 이전 해외 거주 기간, 남한입국 이전 해외 거주 여부,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정치성향의 다섯 변수를 활용하였다. 나이 및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은 부분적으로는 사회화론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전체 삶 중 북한에서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분석에 포함하였다.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text{탈북 시 나이}/\text{현재 나이}) * 100)$). 또한, 탈북 이후 남한에 바로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였을 경우, 이 기간에 이미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을 수 있기에 해외 거주 기간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제 설문 응답자 중 약 30.9%가량만 탈북 이후 남한으로 직행하였고, 나머지는 중국(65%), 태국(1.97%), 러시아(1.32%) 등지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한입국 이전 거주했던 국가가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이 다른 국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통제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정치성향(진보와 보수)을 포함하였다.¹⁵⁾

아래 <표 5>에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총 여섯 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문항을 단순 산술평균으로 종합한 종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저자들은 이론적으로 위 여섯 문항이 종합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지만,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결과 위 여섯 문항은 하나의 차원 혹은 두 개의 차원으로 묶이지는 않았다.¹⁶⁾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위 문항들은 시장경제의 다양한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서로 상관성이 낮은 문항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을 독립적인 종속변수로 두어 개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도 <표 6>에서 함께 보고한다. 각 응답은 더 높은 점수가 더 시장 지향적인 인식을 의미하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변환하였다.

<표 5>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로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
- 15)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구분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느낀다는 기존연구들이 있다.
- 16) 또한, 시장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도 경쟁에는 찬성하면서도 너무 높은 불평등에는 반대할 수 있다. 즉, 시장경제의 요소별로 찬반의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 이 여섯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최저 0.06~ 최고 0.3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표 5〉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종합지표

	coef	robust se	p> t
[경제 변수]			
직업유무	0.405**	0.177	0.02
소득수준	0.041	0.038	0.27
현재 경제 상황	0.103	0.128	0.42
과거 경제 상황	0.143	0.089	0.11
[사회화 변수]			
장마당 경험	0.170	0.155	0.27
성격 형성기	0.274	0.274	0.32
교육수준(북한)	0.071	0.082	0.39
교육수준(남한)	0.034	0.048	0.48
[계층 변수]			
(탈북 이전) 정치적 계층	-0.321**	0.139	0.02
(탈북 이전) 경제적 계층	0.382***	0.138	0.01
[통제 변수]			
제 3국 거주기간	0.006	0.022	0.78
제 3국 거주여부(더미)	-0.004	0.185	0.99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0.225	0.428	0.60
나이(ln)	0.598*	0.358	0.10
정치성향(보수)	0.100***	0.035	0.00
_cons	1.781	1.376	0.19

*p<.1, **p<.05, ***p<.01

〈표 5〉는 전체 문항을 산술평균하여 종합한 지표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이다. 그 결과, 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직업 유무, 계층 변수 중에서는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과 경제적 계층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회화 변수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선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 시장경제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거

의 경제 상황 및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변수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마당 경험, 성격 형성기, 남한 및 북한에서의 교육수준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의 유사 시장경제 학습(장마당 경험)이 탈북 이후 시장경제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성격 형성기의 경우, 2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탈북한 경우 시장경제에 대해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준을 30세로 설정한 분석 결과도 동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 변수의 경우, 북한에서의 교육과 남한에서의 교육의 효과는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서로 다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예상 역시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계층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해보면,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이 높을수록 탈북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탈북 이전 정치적으로 상층 계층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일수록 현재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계층 차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남한 사회로 이주한 이후 과거와 현재와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 향수(nostalgia)일 수도 있고, 북한에서 상층 정치 계층 출신으로서 확립해 온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 탈북 이후에도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탈북 이전의 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조금 확대하여 해석해보자면, 북한에서의 경제적 엘리트는 주로 중국과의 교역이나 장마당 등의 시장 경제적 요소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은 탈북 이후에도 남한의 시장경제에 대해 큰 괴리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상층부에 속했던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빈부격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고 부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에 대해 보다 온건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아래 <표 6>에서는 개별 문항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를 같이 보고한다.

〈표 6〉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개별 문항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소득차이 필요	기업의 개인소유 확대	개인에 생계유지 책임	경쟁 필요	노력하면 생활 나아짐	부는 모두가 나날 만큼 확대 가능
경제 변수	직업유무	0.109 (0.340)	0.336 (0.351)	0.376 (0.413)	0.826** (0.326)	0.388 (0.395)	0.277 (0.341)
	소득수준	0.139* (0.083)	0.038 (0.084)	0.083 (0.108)	0.083 (0.076)	0.018 (0.097)	-0.091 (0.081)
	과거 경제 상황	-0.311* (0.172)	0.254 (0.237)	0.100 (0.218)	0.340* (0.182)	0.157 (0.214)	0.283 (0.197)
	현재 경제 상황	0.256 (0.232)	-0.158 (0.227)	-0.205 (0.243)	0.411** (0.185)	0.325 (0.229)	-0.105 (0.207)
사회화 변수	북한에서 산 비중	0.201 (0.738)	0.904 (0.777)	-0.203 (0.776)	-0.039 (0.693)	0.746 (0.808)	-0.296 (0.742)
	성격 형성기	-0.411 (0.543)	-0.415 (0.577)	0.486 (0.677)	0.190 (0.550)	-0.776 (0.631)	-0.856 (0.519)
	장마당 경험	0.313 (0.324)	0.158 (0.320)	-0.300 (0.364)	0.252 (0.301)	0.328 (0.355)	0.530* (0.283)
	교육수준 (북한)	0.140 (0.178)	0.097 (0.182)	0.059 (0.218)	0.016 (0.167)	0.033 (0.219)	0.075 (0.193)
	교육수준 (남한)	0.016 (0.090)	-0.075 (0.100)	0.102 (0.106)	0.095 (0.085)	-0.013 (0.105)	0.065 (0.090)
계층 변수	(탈북이전) 정치적 계층	-0.347 (0.272)	-0.447* (0.255)	-0.452* (0.267)	-0.225 (0.230)	-0.126 (0.284)	-0.457* (0.253)
	(탈북이전) 경제적 계층	0.498* (0.285)	0.357 (0.283)	0.343 (0.283)	0.298 (0.249)	0.273 (0.307)	0.472* (0.265)
통제 변수	나이(ln)	-0.010 (0.018)	-0.014 (0.019)	-0.003 (0.020)	0.024 (0.016)	0.041** (0.020)	0.046*** (0.016)
	정치성향 (보수)	0.174** (0.068)	0.210*** (0.074)	0.176** (0.075)	-0.011 (0.064)	0.066 (0.071)	-0.064 (0.060)

*p<.1, **p<.05, ***p<.01

앞서 분석한 종합지표의 경우, 개별 문항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주지 못하고 단 순 산술평균을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장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각각을 분해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종합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며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해 개별 문항 분석을 추가하

였다. 먼저 '소득차이가 필요하다'는 문항에는 소득수준, 과거 경제 상황, 탈북 이전의 경제적 계층, 정치성향(보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고, 과거의 경제 상황이 좋았을수록, 그리고 탈북 이전의 경제적 계층이 높았고,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인 응답자일수록 소득차이가 필요하다는 자유경제적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의 개인소유 확대' 문항에 대해서는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과 정치성향(보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이 높았던 응답자일수록 기업의 개인소유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일수록 기업의 개인소유를 지지하였다. 유사하게, '(국가보다는) 개인에 생계유지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과 정치성향(보수)의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시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이 높을수록 개인의 책임을 덜 강조하고 국가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쟁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직업 유무, 과거 및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경제적 변수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경제여건이 좋을수록 경쟁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노력하면 생활이 나아진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 문항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는 모두가 나눌 만큼 확대 가능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장마당 경험,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 탈북 이전의 경제적 계층, 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마당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부는 확대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지하였으며,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이 높을수록 부의 확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고, 반면 탈북 이전의 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부는 모두가 나눌 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종합지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변수나 사회화 변수보다는 계층 변수의 영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탈북 이전의 정치적 경제적 계층이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였는데, 탈북 이전의 정치적 계층이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Model 2, 3, 6), 탈북 이전의 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1, 6) 이 같은 결과는 모든 문항에서 일관적이지는 않았으나 (Model 4, 5는 예외) 적어도 다른 변수에 비해 많은 문항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단순히 경제적 여건이나 북한에서 지낸 시간, 혹은 특정 시기 사회화의 문제보다

는, 오히려 북한에서의 계층적 유산의 영향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설명 변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한다.

V. 결론

분석 결과는 탈북 이전 계층이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고 또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적응에 있어 상당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결국 과거의 계층적 유산이 현재의 태도나 인식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것이 라면, 이 같은 발견을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재사회화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분석 결과, 공교육 경험과 같은 일반 교육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원 등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체제 적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과거 계층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정치적 엘리트 출신의 경우, 시장경제에의 적응의 지체가 더욱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정치적 계층이 모두 동등하며, 경제적 계층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전문성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향수를 다소 줄이고,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위의 분석은 단년도 데이터를 통해 진행되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을 전후한 시기의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인과적 논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랜덤 샘플링이 어렵고 스노우볼 채집 방식으로 응답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 탈북년도를 층화한 채집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다만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고,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그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근본적 한계 중 하나는 남한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 인과적인 증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 이탈 이후 남한 입국 사이에 상당히 긴 공간적, 시간적 갭이 존재하기에, 그 기간의 경험이,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입국 이전의 경험도 변수화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는 여러 해에 걸친 추적 조사가 아니므로 인과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다소 어렵다. 또한, 탈북 직전의 이들의 경제 인식에 대한 조사는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를 과연 남한입국 이후 변화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시장경제 노출 이후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주장은 태도의 변화에 대한 인과적 주장이 아니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설계 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현 수준에서 가능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없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탈북해서, 아직 북한에서의 경험이 남한에서의 경험을 압도하는 이탈주민의 태도를 분석하여 이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 직후의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온전한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탈북 직후의 북한이탈주민도 하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통해 자유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학습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처치가 가해진 샘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무시하더라도 연구 분석에 필요한 만큼의 탈북 직후의 북한이탈주민의 샘플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태도 연구에서 인과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통제된 실험실 연구밖에 없으나, 실험실 연구조차도 태도의 지속성 여부는 관찰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즉,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과대해석이지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부 록>

부록-표 1) 기술통계표

변수명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득 차이 필요	305	6.472131	2.490781	1	10
기업의 개인소유 확대	302	5.887417	2.557103	1	10
개인에 생계유지책임	305	4.970492	2.755816	1	10
경쟁 필요	305	7.37377	2.398869	1	10
노력하면 생활 나아짐	305	6.685246	2.744482	1	10
부는 모두가 나눌 만큼 확대 가능	303	6.633663	2.281756	1	10
직업(유무)	305	0.468853	0.499849	0	1
소득수준	305	2.747541	2.117876	1	8
과거 경제상황	304	2.756579	0.832482	1	4
현재 경제상황	305	3.016393	0.788315	1	5
장마당 경험	305	0.419672	0.494316	0	1
(탈북이전) 정치적 계급	303	1.485149	0.613542	1	3
(탈북이전) 경제적 계급	304	1.667763	0.578618	1	3
교육수준(북한)	305	2.383607	0.896114	0	5
교육수준(남한)	304	2.019737	1.98	0	5
성격 형성기 (탈북연도=<=25)	305	0.521312	0.500367	0	1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305	71.30068	16.05318	10.52632	98.14815
나이	305	45.12131	16.62379	19	80
정치성향 (높을수록 보수적)	285	5.403509	2.458527	1	10

부록-표2)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원문

Q17~22	Now I'd like you to tell me your views on various issues. How would you place your views on this scale? 1 means you agree completely with the statement on the left; 10 means you agree completely with the statement on the right; and if your views fall somewhere in between, you can choose any number in between.										
Q17	Income should be made more equal										We need larger income differences as incentives for individual effort
	1	2	3	4	5	6	7	8	9	10	
Q18	Private ownership of business and industry should be increased										Government ownership of business and industry should be increased
	1	2	3	4	5	6	7	8	9	10	
Q19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one is provided for										People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to provide for themselves
	1	2	3	4	5	6	7	8	9	10	
Q20	Competition is good. It stimulates people to work hard and develop new ideas										Competition is harmful. It brings out the worst in people
	1	2	3	4	5	6	7	8	9	10	
Q21	In the long run, hard work usually brings a better life										Hard work doesn't generally bring success - it's more a matter of luck and connections
	1	2	3	4	5	6	7	8	9	10	
Q22	People can only get rich at the expense of others										Wealth can grow so there's enough for everyone
	1	2	3	4	5	6	7	8	9	10	

부록-표 3) 기초통계량- 한국인 정치경제 인식조사

변수명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득 차이 필요	1,210	6.47	2.057	1	10
기업의 개인소유 확대	1,196	5.11	1.944	1	10
개인에 생계유지책임	1,228	4.97	1.984	1	10
경쟁 필요	1,223	3.63	1.753	1	10
노력하면 생활 나아짐	1,234	4.31	2.023	1	9
부는 모두가 나눌 만큼 확대 가능	1,191	6.63	1.548	1	10

■ 참고문헌

- 권수현·이성우. 201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비교: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8(3): 49-74.
- 권혁용. 2013.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한국정당학회보》, 12(1): 303-322.
- 안상훈. 202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태도 차이에 관한 다집단경로분석 연구.” 《한국사회정책》, 27(1): 65-87.
- 오현진·박종민. 2019.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53(2): 129-154.
- 이철승·황인혜·임현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자산 불평등, 보험 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 《한국정치학회보》, 52(5): 1-30.
- 정영철. 2004.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8(1): 77-104.
-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 2020. “탈북자통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0.06.01
- 통일연구원. 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_____ . 2016.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 Anderson, Christopher J., & Jonas Pontusson. 2007. “Workers, worries and welfare states: Social protection and job insecurity in 15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2): 211-235.
- Bartels, Larry, & Simon Jackman. 2014. “A Generational Model of Political Learning.” *Electoral Studies*, 33: 7-18.
- Bilodeau, Antoine, Ian McAllister, & Mebs Kanji. 2010. “Adaptation to Democracy among Immigrants in Austral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1(2): 141-165.
- Blekesaune, Morten. 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393-403.
- Careja, Romana, & Patrick Emmenegger. 2012. “Making Democratic Citizens: The Effects of Migration Experience on Political Attitud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7): 875-902.
- Dalton, Russell. 1994. “Communists and Democrats: Attitudes toward

- Democracy in the two German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4): 469-493.
- Easton, David, & Jack Dennis. 1969.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Origins of Political Legitimac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Eckstein, Harry. 1966. *Division and cohesion in democracy: A study of Norwa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rikson, Robert S. 1990. “Economic Conditions and the Congressional Vote: A Review of the Macrolevel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2): 373-399.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bson, James L. 1996. “Political and economic markets: Changes in the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toward political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within the mass culture of Russia and Ukraine.” *The Journal of Politics*, 58(4): 954-984.
- Haggard, Stephan, & Marcus Noland. 2010. *Political attitudes under repression: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Honolulu, HI: East-West Center.
- _____. 2011.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Hayo, Bernd, 1999. “Micro and Macro Determinants of Public Support for Market Reforms in Eastern Europe.” *ZEI Working Paper*, B25.
- Jennings, Kent, & Richard Niemi. 1981. *Generations and Politics: A Panel Study of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P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versen, Torben, & David Soskice.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893.
- Lewis-Beck, Michael, &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 Linz, Juan J. 1988. “Legitimacy of Democracy and the Socioeconomic

- System.” In Dogan M. (eds). *Comparing Pluralist Democracies. Strains on Legitimacy* (pp. 65-113), Boulder, Colo. and London: Westview.
- McClosky, Herbert, & John Zaller. 1984. *The American Ethos: Public Attitudes Toward Capitalism and Dem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eltzer, Allan H., &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 _____. 1983. “Tests of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Public Choice*, 41(3): 403-418.
- Mishler, William, & Richard Rose. 2001a. “Political Support for Incomplete Democracies: Realist vs. Idealist Theories and Measur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03-320.
- _____. 2001b.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 Moene, Karl Ove, & Michael Wallerstein. 2001. “Inequality, soci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59-874.
- Rehm, Philipp. 2009.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7): 855-881.
- _____. 2016. *Risk inequality and welfare states: Social policy preferences, development, and dynam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p-Eleches, Grigore, & Joshua A. Tucker. 2014. “Communist socialization and post-communist economic and political attitudes.” *Electoral studies*, 33: 77-89.
- Rohrschneider, Robert. 2004. *Learning Democracy: Democratic and Economic Values in Unified German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ller, Edeltraud. 1994. “Ideological basis of the market economy: Attitudes toward distribution principles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Western and Eastern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0(2): 105-117.
- Shiller, Robert J., Maxim Boycko, & Vladimir Korobov. 1991. “Popular Attitudes Toward Free Markets: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Compared.” *American Economic Review*, 81: 385-400.

- Svallfors, Stefan.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233-304.
- _____. 1999. "Political Trust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Sweden and Norway." *European Societies*, 1: 241-268.
- Welzel, Christian. 2013. *Freedom Rising: Human Empowerment and the Quest for Emancip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Stephen. 2016. "Do Younger and Older Immigrants Adapt Differently to Canadian Politics?." In *Antoine Bilodeau (eds). In Just Ordinary Citizens?: Towards a Comparative Portrait of the Political Immigrant* (pp. 166-179),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Wlezien, Christopher. 2015. "The Myopic Voter? The Economy and US Presidential Elections." *Electoral Studies* 39(3): 195-204.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s Towards the Market Economy

Inyoung Cho & Chong-Min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s towards the market economy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attitudes based on economic hypotheses, socialization hypotheses, and class hypotheses. Despite various educ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accumulation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analyzing their adaptation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a relatively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various elements of the market economy, but their support was largely explained by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ass in the North, rather than the recent economic conditions, the timing of the defection, the length of the experience in the North, or the education level in the South/North. In particular, previous political elites' attitude towards the market economy was more negative, while that of the economic elites was more positive. This suggests that the class gap before and after defection or nostalgia for past social class may cause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system or lead to a delay in adap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ontributes to the stud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the liberal market economy through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survey data.

※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 toward market economy, legacy of closed economy